

# 섭씨 1.5도 기후 목표를 사수하는 2025년

## 기후환경이야기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 의장



오는 20일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미국의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다. 국제사회에 경제와 무역, 안보, 그리고 기후환경 분야 등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2025년, 올해는 어떤 해가 될 것인가.

연초부터 기후환경 혹은 에너지 이슈를 말하고 토론하는 공간이 몹시 좁아 보인다. 사회적 분위기와 상황이 그렇다. 그러나 인류사회의 가장 중대한 문제에 목소리가 없다면 우리 사회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

인간을 포함한 자연계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라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화두이다.

지난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무더운 해'였다. 전년도와 비교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지난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구의 평균온도가 1.6도 상승했다.

10년 전 인류가 다짐했던 파리협약의 목표, 1.5도를 넘어선 것.

국내를 비롯해 세계 각처는 지구온난화, 기후위기의 폐해로 조용할 날이 없었다. 기록적인 홍수와 가뭄, 태풍 그리고 극심한 폭염과 산불이 빈발했다.

극지방의 해빙과 해양의 온난화도 멈출 줄을 모르고 진행되었다. 모든 요인은 사람이 초래한 온난화 때문이다.

온난화의 징표, 대기 중 CO<sub>2</sub> 농도 또한 지난 12월 말경 424PPM을 기록, 매년 2~3PPM이 증가하고 있다.

1990년 초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될 무렵의 350PPM에서 이만큼 늘었다. 그만큼 화석연료의 남용과 숲 파괴가 계속되었다는 의미이다.

지난해 화석연료에 의한 CO<sub>2</sub> 발생량도 전년도보다 소폭이지만 증가했다. 그만큼 석탄 석유 가스를 많이 이용했다.

무서운 속도로 재생에너지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전기차 보급이 급진장하고 있으나 아직 그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화석연료 남용 그리고 다량의 CO<sub>2</sub> 배출, 대기 중 CO<sub>2</sub> 농도 증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의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한 해였다.

우리 인류는 과연 파리협정의 목표인 1.5도를 사수할 수 있을까. 과학자들은 1.5도 목표는 사수할 수 있다고 말한다. 기후위기에 맞서는 확고한 정책을 시행하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한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화석연료 의존형 에너지 정책이 계속된다면 세계 평균기온은 3도에 육박한다.

지구는 '미지의 영역(Uncharted Territories)'으로 대재앙이 불가피하게 된다. 지난해 경험했던 인류가 경험

했던 온난화의 폐해와 비교해 상상을 초월한다. 급년 1.5도를 지키는 전환점을 가져가야 한다.

1.5도 목표를 사수하려면 합당한 단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은 필수이다. 국제사회는 '2050 탄소중립'을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이행하려면 2030년 45% 온실가스 감축하고 2035년 60% 감축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현 수준보다 3배로, 에너지 효율성을 2배로 높일 것을 합의한 바 있다.

2030년대 석탄을, 2040년대 석유 가스의 퇴출을 단행해야 한다. 세계는 '모든 에너지 체계에서 화석연료로부터 전환'을 합의했었다.

우리는 기후위기의 엄중한 현실 위에서 있다. 우리는 세계 10위권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세계적인 '느림보' 국가이기도 하다. 이를 탈피해야 된다. 모든 국가가 그렇듯 우리도 2035년을 목표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을 오는 2월 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2050 탄소중립과 느림보 탈피의 여정을 여기에 담아야 한다. 지금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국가의 리더십이 부족한 어려운 여건이지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인류의 목표인 1.5도 사수를 위해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토론하고 행동하는 한 해가 되기를 염원한다.

## 社說

# 더불어민주당 여론의 경고 새겨 들어야

##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 1.4%p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4주 연속 좁혀지고 있다. 13일에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42.2%, 국민의힘 40.8%로 양당 간 지지율 격차가 1.4%p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에 대한 여론의 경고가 예사롭지 않다.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자업자득이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국정 공백을 메우고, 대외 신인도 하락을 막기 위한 야당의 본분을 잊고 윤 대통령의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을 재촉하며 혼란을 부추겼다. 자신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후임인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까지 흔들었다. 국가의 미래보다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식의 안하무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탄핵소추의 핵심인 내란죄 판단마저 탄핵 심판에서 철회했다.

중도층을 외면한 강경 발언들도 잇따랐다. 국회 탄핵소추단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내란죄를 맡은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것'이라는 극언을 했다.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갖고 덤비면 가슴을 열고 쏘라고 하라,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이라'는 발언도 폭력을 유발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다. '물 대포든 장갑차든 헬기든 다 동원해야 된다'거나 '카카오톡 등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고발하겠다'는 발언도 구시대적 발상이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공수처장을 두고 '바보 공수처장, X맨 공수처장'이라고 조롱한 것도 충격적이다.

민주당은 차기 집권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당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차기 대선주자로서 지지율 1위를 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정말 재집권을 노린다면 지금이라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나서야 한다. 국민들에게 집권할 만한 정당인지 신뢰도 보여 줘야 한다. 무엇보다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 적합도와 비호감도 모두 1위에 오른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론의 경고'를 새겨 넣는 것이다.

# 전남 국립의대 신설 또다시 좌절 안돼

## 의정 갈등과 별개 문제로 봐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한다고 발표하면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또다시 안개 국면이다. 13일 정부 및 전남도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 나간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급 전망과 함께 각 학교의 현장 교육 여건까지 감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부의 2000명 증원으로 5058명이 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한발 물러선 정부의 태도 변화는 탄핵 국면에 처한 위기 상황에서 장기화된 의료계와의 갈등을 접고 대화의 장을 열어보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다만 최근 대한의사협회 신임 집행부가 출범했지만 정부의 대화 요구에 대한 즉답을 피하고 있

다. 문제는 전남의 의대신설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것이다. 탄핵 국면 전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전남 의대 신설까지 약속하며 급물살을 탔지만 이번 입장 선회로 인해 전남도는 애를 태우는 모습이다. 지역민들도 의대 신설이 좌절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전남은 30년 숙원인 의대 신설을 위해 의대 유치를 놓고 벌인 동서갈등을 통합하고,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이뤄냈다. 이미 교육부에 통합 계획서까지 제출하면서 의대 신설의 '8부 능선'까지 도달한 시점여서 현재 상황에 망연자실한 모습일 것이다. 그동안 전남도와 도민, 지역 정치권과 각계각층의 의대 신설 열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전남 국립 의대 신설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되는 중차대한 문제다. 전남 의대 신설은 의대 정원을 놓고 벌이는 의정 갈등과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 정부는 의대 없는 전남에 국립 의대 설립 방침에 한치의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의료계 역시 열악한 전남의 의료환경을 개선될 수 있게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의회 의사당 서쪽에서 미 해병대 군악대 '더 프레스IDENT츠 오운(The President's Own)'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연습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AP/뉴시스

## 서석대

옛날 중국에서 도둑이 물건을 훔치러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들켰다. 주인은 큰 소리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웃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러자 도둑은 몽둥이를 집어 들며 "도둑 잡아라"하며 피해자인 척해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다'는 뜻의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유래로 추측되는 이야기다.

우리가 흔히 부조리하거나 황당한 상황을 접할 때 '적반하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곤 한다. 적반하장은 잘못된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치며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나서는 경우를 비꼬아 표현하는 말이다.

특히 최근에는 이 표현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탄핵정국을 맞은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에 인용되면서 그 뜻과 사용법에 대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경찰은 지난 3일 한남동 관저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5시간 30분 만에 중지됐다. 경호처가 경호 인력 200여 명을 총동원해 인간 띠를 만들고 차벽으로 완강하게 저항한 데 따른 것이



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영장이 위법한 절차를 통해 발부됐다고 하며 공수처에 내란 수사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므로 강제수사 자체가 위법하다"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위헌·위법한 영장 집행을 감행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조만간 영장 집행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경찰 특공대와 기동대 투입을 놓고 발끈했다. 체포 시도 때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가 나선다면 그게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법적 절차에 따라 영장 집행한 것을 오히려 불법이라고 우기는 데다 '내란 수괴'로 지목되고도 체포를 피하면서 되레 경찰을 향해 내란이란 단어를 꺼낸 윤 대통령 측은 주장이 불합치하고 초법적인 발상이다. 이럴 때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최동환 취재2부 선임부장

| 全南日報                           |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 논설실장 이용환   | 편집국장 박성원 |
|--------------------------------|--|--|----------|
| 민주주의 구현<br>진실보도 실천<br>지역개발 선도  | 대표전화 (062)527-0015<br>기사제보 (062)510-0331   | 경영지원팀 (062)510-0421<br>광고영업팀 (062)519-0710                       |          |
|                                | 편집부 (062)510-0412<br>취재1부 (062)510-0380<br>취재2부 (062)510-0394<br>정치부 (062)510-0340 | 문화체육부 (062)510-0351<br>온라인뉴스부 (062)510-0461<br>사진부 (062)510-0391 |          |
| www.jnilbo.com<br>m.jnilbo.com | 구독료 월 1만5천원<br>1부 800원   |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br>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          |
|                                | 구독신청 (062)510-0471   | 광고문의 (062)512-0100   |          |
|                                | FAX (062)510-0436  | 서울지사 (02)725-8890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